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18.(월) 13:00 / 12. 19.(화) 조간 배포 2023. 12. 18.(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심의·의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세종)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위원회에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촉된 제1기 지방시대위원* 14명과 당연직위원** 15명이 참석하였다.

* 위촉위원(총 19명) : 우동기(위원장), 이정현(부위원장), 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

** 당연직위원(총 18명) :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위원회는 ❶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❷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❸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❹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❺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❻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보고받았다.

[심의 안건 핵심내용] (☞ 참고 : 안건별 주요 내용)

❶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572개 사업, 10.9조원)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강화,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평가방식 간소화를 통한 피평가자 부담 완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❷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추진기반도 마련하였다.

❸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안)**」은 혁신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으로,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특히 이번 2차계획에서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하였다.

❹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중요 과제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시대기획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❺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은 지방투자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개정하여 '24.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❻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은 지역상권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향후 상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함께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발언]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발효가 지연되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7.10.)이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9.14.)과 지방시대 엑스포(11.2.)를 개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중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11.2.)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한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1기 지방시대위원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되어 전국적인 지방시대 거버넌스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분과위원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⑨, 시행령 제60조/제61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수행, 지방시대위원으로 구성

⇨ ‘전략기획분과위원회, 혁신성장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생활기반분과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향후 중요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첫 연차별 계획으로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 각 시·도와 중앙부처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며, 특히 금번 종합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도 처음 수립되는 만큼 유의미하고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각 시·도를 순회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안건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총괄)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김경희 (044-251-3107)
	지방시대기획단 예산조정평가과 (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책임자	과 장 이종훈 (044-251-3113)
		담당자	전문관 조혜영 (044-251-3118)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박욱하 (044-205-350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신정대 (044-203-442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4456)
		담당자	사무관 김세환 (044-201-449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책임자	과 장 이왕재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강효민 (044-204-78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안건별 주요 내용**

1.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지방시대기획단)

□ 평가 근거 및 개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572개, 10.9조원)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 (지원계정) 총 102개 사업, 8.9조원, (자율계정) 총 470개 사업, 2.0조원

본 계획안의 지침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외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평가 방향

지방시대위원회는 본 계획에 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부처 및 지자체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평가방식 간소화 및 지표 통합을 통한 피평가자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❶(**'지방시대' 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강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11.2. 발표)에 기반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신규사업에만 적용되었던 '균형발전 목표와의 부합성' 평가항목을 기존 사업까지 확대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❷(**부처 및 지자체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기존 예산규모 기준의 평가대상 선정이 아닌 지자체의 평가대상 자체 선정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완화하여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❸(평가방식 간소화 및 지표 통합을 통한 피평가자 부담 완화)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상대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배분방식을 일원화하여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였고, 평가항목의 유사지표를 통합하여 자체평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주요 감점, 질의사항에 대한 Q&A 제공 등을 통해 평가지침 보완 및 보고서 작성서식 개정을 추진하여 피평가자의 이해도를 증진할 예정이다.

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의의 및 추진 배경

정부는 올해 첫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과 대응시책을 총망라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상향식(Bottom-up) 계획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였다.

통상적인 계획 수립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인 반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 시·군·구에서 각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주기(5년)와 일치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 주요 내용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로 국정목표와 일치시키는 한편,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경제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를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3대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아울러, 전략의 추진 기반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❶(추진 기반 :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 공고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6년까지 150개까지 집중 발굴한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배분금액 격차 확대, 성과분석 등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운용하여 연 2~3조원 규모로 투자금을 확대시켜 나간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통계를 개발·활용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진단·발굴하기 위한 정성적 진단 도구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❷(전략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설계를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 나간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었다.

❸(전략 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변화된 인구와 생활구조에 맞춰 주거 환경개선도 개선해 나간다. 매년 인구감소지역 10여곳 내외를 선정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으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300개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편의 증진사업과 비대면 진료 및 거점의료기관 확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문화취약지역 맞춤형 공연 지원 등 교통부터 의료·돌봄, 문화까지 전 영역에 걸쳐 생활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❹(전략 3: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실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인구 제도를 확립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7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였으나,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지인들의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3.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수립 (국토교통부)

□ 추진 배경

2005년부터 추진된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2019년 말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2023~2027)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비전·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2023.9월)을 토대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사업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2023~2027)의 목표는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혁신기능 고도화'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유치, 혁신인재 양성 등 혁신도시의 질적 도약, ▲정주혁신 측면에서는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한 스마트한 정주여건 조성,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주변 생활권역과 연계강화 사업지원 등 혁신거점의 '성과확산'을 목표로 한다.

❶(전략 1 : 혁신을 창출하는 특화발전) 첫째,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기업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계창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혁신도시 이전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특구와 연계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한다. 셋째, 지역대학·공공기관·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학과 운영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역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위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이전기관 역할을 확대한다.

❷**(전략 2: 활력있고 스마트한 정주환경)** 첫째, 청년세대의 수요 맞춤형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문화·여가시설과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시간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혁신도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둘째, 교통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한다.

❸**(전략 3: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첫째, 상생발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제품 구매 및 공공자원 개방, 장학재단 설립·운용 지원 등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한다. 나아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혁신도시와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 기여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동 계획의 총 사업비는 3조 2,217억이며, 국비 1조 5,209억원(47%), 지방비 1조 3,475억원(42%), 민자 등 3,537억원(11%)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도시 생산 유발효과는 약 6조 7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조 6,864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유발은 42,028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2차계획에서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되었다.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산업부는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방투자 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고, 그 중 지방투자 촉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금번 제도개선안은 국비 지원한도가 작아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고, 일부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자동화로 인한 고용수요 감소 등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산업부는 상기 개선 방안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24.1.1.부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배경

중기부는 지역소멸 등 위기극복과 소상공인 상생, 지역 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3~'25)」을 수립하였다. 이는 지역상권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앞으로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으로 상권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 추진 방안

동 종합계획은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 조성으로 지역상권을 재건’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상권전략 기획 등 예비 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전략으로 ‘❶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❷지속가능한 상권생태계 조성, ❸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❹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구축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지역상권발전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등을 측면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상권의 유형별로 전략수립을 차별화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상권활성화사업이 ’2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사업중간(3년차)에 활성화, 상생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후 추가(2년) 지원여부를 결정